

광주시-시의회, '힘겨루기' 언제까지... 시민 피로감

행정사무감사 진행 '강대강' 대치 피감기관 '부실자료'로 감사 중단 행정부시장, 사과 거부했다 반복 '행감 취지 퇴색...소모적 대치 중단'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와 집행부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된 가운데, 당초 사과를 거부하던 광주시가 하루 만에 이를 반복하고 갈등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시민들은 민선 8기 내내 반복되는 '의회-집행부 힘겨루기'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입장이다. 12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업건설위 증인으로 출석해 피감기관의 부실한 자료 제출로 감사가 중단된 데 대해 사과를 거부한 고광완 광

주시 행정부시장이 다음날 열린 행정자치위 행감에서 의원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고 부시장은 "행감 자료에 통계 오류나 다소 부실한 내용이 있었다.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추가 행감) 자료 제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평환 행정자치위원장은 "부실한 자료나 허위 자료 제출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사에 출석해 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부터 행감을 진행중인 시의회는 광주시 산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서 허위·미비점을 발견해 수차례 지적했다. 여기에 5일과 8일에는 광주테크노파

크·광주통합공항교통국에서 누락 등 오류가 포착, 감사가 연이어 중단되기도 했다. 의회는 광주시에 중단 사태를 초래한 잘못을 묻고 사과를 요청했으나 "부실 자료 제출은 맞지만 감사가 중단될 정도는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의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 날선 대립각을 이어갔다. 연기된 행감은 마지막 날인 13일 재개된다. 행정부시장의 사과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지속적인 강대강 갈등에 지역 정가는 '의미없는 소모적 대치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022년 전반기 시의회 행감에서 '고압적 감사'를 이유로 광주시와 의회 간 갈등이 발생, 우여곡절 끝에 17일 만에 사태가 봉합된 바 있다.

광주시와 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도 차갑다.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지역위 관계자 김모씨는 "민선 8기 행감 때마다 의회와 집행부 간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당 끼리도 협치가 안 된다'는 말을 한다"며 "집행부는 비판·견제기관인 시의회를 존중하고 의회 또한 날 선 비난보다 변화의 동반자로서 (집행부) 대해야 한다. 행감이 끝나면 내년도 본예산 심사(7조6000억원 규모)가 있는데 감정 싸움이 거기까지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원 정남현(35)씨는 "갈등의 피해자는 오롯이 시민들이다. (감사는) 투명한 시정과 앞으로의 행정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아닌가"라며 "정해진 일자 내에 마치

기 위해 결국 조급하게 끝낼 수밖에 없다. 이는 행감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위다. 과거에 있었던 갈등이 왜 또다시 발생했는지 되짚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는 파행의 원인과 함께 양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제시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번 상황은 (각자의 역할 속에서) 의회와 시가 기본적인 힘겨루기 내지는 안 밀리려고 하는 의식이 반영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광주시 산하기관의 자료 퀄리티 문제가 드러난 만큼, 앞으로는 이들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 이와 함께 의회는 견제감시 과정에서 침소봉대 경향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모정환 도의원 "민간공항 이전, 전남 적극 나서야"

이주자 지원 등 특별법 개정 강조

전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사천)은 무안공항 활성화 및 민간공항 이전 추진과 관련해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모 의원은 12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정감사에서 군공항 이전 지역의 책임을 전남과 무안군에 전가하는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일을 두고 "이 사안은 광주, 전남, 무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특히 "광주군공항이전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과 달리 이주지역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면제와 이주자 생계·이주 정착·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없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전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 7월 6년만에 진행된 3차 회동과 관련해서도 "서로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며 "전남도 또한 기다리지만 말고 먼저 조율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장헌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에 어느 정도 성의를 더 보인다면 무안국제공항을 거치는 KTX 개통 시까지는 관련 사안이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내년 개통이 예정됐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광주송정~목포' 구간은 사업 구간 내에서 다수의 유적이 발견돼 정밀 발굴 조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당초 사업 마무리 기간이었던 2025년보다 2년 늦춰진 2027년 개통될 예정이다. 호남KTX의 지연 개통에 따라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오지현 기자



북구,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 정책포럼
문인 북구청장과 유관기관 대표, 여성 참가자들이 12일 광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친화도시 정책발굴을 위한 '여성행복응원 네트워크 정책포럼'에서 여성의 참여와 성평등 실현을 위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김나운 시의원 "극락강역 재생사업 백지화 대책 마련"

김나운(사진) 광주시의원이 광주시가 중단 검토 중인 '극락강역 문화재생사업'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1일 광주시 문화체육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2020년부터 진행된 극락강역 폐사일로 재생사업의 여건 변화와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규모

축소가 맞물려 최종 사업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사와 관련된 예산 및 계약 문제와 매몰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업 규모가 공사비 상승과

도시계획시설 문제로 당초 추진하려던 1165㎡/5층에서 384.45㎡/2층으로 크게 줄었고, 토지임대로 인한 비용도 2022년 11월부터 5년 동안 계약돼 있어 연 2755만원씩 계속 지출되고 있다"며 "문제는 공사 중단으로 인한 후속 조치들로, 총 예산 43억원(국비19·시비24) 가운데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은 15억4000만원이다. 향후 공사 지연과 취소에 따른 배상금과 자제 계약에 대한 부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른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문의/예약 : 1522-1901

무안-도쿄 진에어(JIN) 정기편 취항 확정!

도쿄온천여행 2박 3일

1인기준 699,000~

* 해당 상품은 출발일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 포함내역 : 항공 및 유류세TAX, 호텔(2인1실), 차량, 가이드, 일정상의 식사 및 관광지 입장료, 2억원 여행자보험 ▶ 쇼핑 : 1회 (면세점)
▶ 불포함 내역 : 기사 & 가이드팁(1인 ¥3,000), 매니팁, 싱글차지(2박/15만원), 국내수송, 기타개인경비, 여권(여권의 유효기간은 출발일 기준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종합여행업 기획여행신고(2억원) 100-000-2024 0474 4822 호 ▷ 관광사업자 등록 제2008-000001호 ▷ 사업자등록 410-81-73451 (주) 조이투어 ▷ 당사는 관광진흥법,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철저히 준수합니다.